

## 새 정부 도서관·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서

2003년 2월

한국도서관협회

### <제안사유>

신세기의 벽두부터 선진국은 정보 경쟁력의 제고, 과학기술의 개발, 정신문화의 함양 등을 정언적 명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체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정보가 국력이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신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등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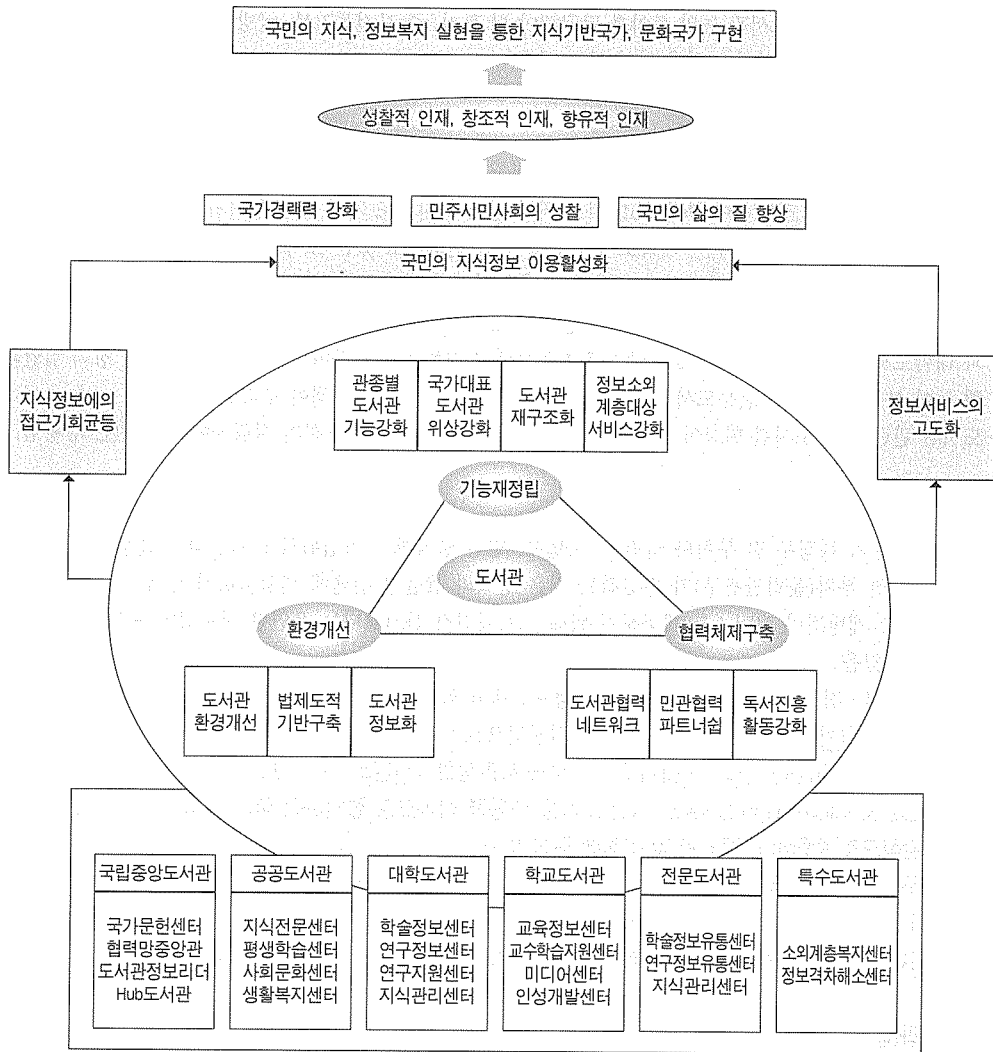
그 가운데 특히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에서 주력하는 분야가 도서관·정보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도서관이 국가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충실해야 자주적 학습태도, 창의적 사고능력, 독서활동의 생활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및 전문도서관은 다종다양한 학술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고급인재의 양성, 교육 및 연구기능의 강화,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명실상부한 정보문화센터로 존재해야 국민 정신문화의 함양, 정보격차의 해소, 사회적 통합, 참여복지의 토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자국내의 모든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정보유통의 관문, 교육 및 연구활동의 허브, 정보문화의 산실로 간주하여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정보기술을 신세기의 키워드 내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도 그 암울한 그림자인 정보 종속성의 심화, 물신평조의 만연, 정보격차의 심화 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기개발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매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를 반추해 보면 도서관은 가사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기여도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 결정적 이유로는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절대 부족,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의 난립현상(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지원기능의 취약성, 전문도서관 과학기술정보 지원체제의 난맥상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한계와 정책적 부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중요법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처에서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외칠 뿐, 그것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세기는 지식정보와 그것을 적시에 소장·제공하는 도서관 네트워크가 국제적 경쟁력, 국가의 연구개발 수준, 국민의 정보해득력, 지역주민의 정보향유권, 자주적 평생학습, 참여형 문화복지 등을 구현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 교육,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지식인프라 및 문화복지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정보센터)의 선진화와 활성화로 귀결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 고급인재의 양성, 연구개발의 강화, 과학기술의 향상, 정신문화의 함양, 정보격차의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한국도서관협회는 새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국가의 정보문화의 인프라인 도서관이 정신문화의 요람, 지식정보의 보고, 연구개발의 전진기로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법적 난맥과 한계를 혁파하는 시대정신과 개혁의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출판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 도서관·정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정보정책의 목표와 과제>



※ 본 그림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 127쪽 '도서관 발전 목표와 과제'를 일부 수정한 것임

### <도서관 정책 및 지원체제>

◆ 현황

- 도서관 관련 기본법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1.29.)이 있음.
- 도서관 정책업무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문화관광부는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음. 도서관 정책자문기구인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전체 도서관의 90% 이상,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50% 정도를 교육인적자원부-지역교육청이 관장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조정2과, 정보화담당관실 등에서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교육청에는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등의 분야를 담당해야 할 부처, 즉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여타의 행정부처는 도서관 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 문제점

- 현행 도서관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1만여 도서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고, 타 부처의 협조와 지원도 거의 없는 형편임.
- 공공도서관 일부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모든 도서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이 2002년에 문화관광부에 의해 입안되었으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발표하는 등 도서관 정책 입안과 집행 등이 분산되어 있음.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정책이 부족한 상태임.
- 도서관 관련 법과 도서관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도서관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 ◆ 대안

- 도서관 업무가 행정부 전 부처와 입법부, 사법부,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행정부의 한 부처(문화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관점보다는 유연한 정책입안과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도서관·정보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칭)를 두어 도서관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경우 1970년 상설 독립기구인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The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 Information Science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백악관 및 의회에 직접 보고
- ※ 별도 조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위상 및 조직을 강화하여 도서관 정책 입안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내 도서관 정책담당 조직체계 구축 필요.

#### ◆ 정책과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칭) 구성·운영 (대통령 직속)
- 도서관 정책 입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연구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행정조직 설치·운영
- 도서관과 관련한 법령의 도서관법으로의 통합 정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가기록물관리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

### <국립중앙도서관>

#### ◆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헌을 납본으로 수집하여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 전송하는 기능 외

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정 기능 도서관 및 도서관학/문헌정보학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나 정보화 표준 등의 개발, 배포 기능을 수행함.

- 관장은 1급 공무원이며, 도서관 조직은 2부(지원연수부, 열람관리부), 6과(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구과,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1담당관(정보화담당관)이 있음.
- 도서관은 본관(본관, 서고동, 연수동으로 구성)과 분관인 학위논문관이 있음. 향후에는 국가디지털도서관 건립으로 3관 체제로 발전할 예정임.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은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와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끝난 상태임.
- 현재에는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함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국민 열람봉사에 치중하고 있음.

#### ◆ 문제점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소장자료, 예산규모 등이 전체적으로 부족함. 2001년 기준 직원 216명, 소장자료 395만책, 예산 276억7천만원임.
- ※ 미국(1999) 직원 4,076명 / 소장자료 12,500만책 / 예산 약 6,000억원  
일본(2000) 직원 862명 / 소장자료 2,475만책 / 예산 약 2,700억원  
중국(2000) 직원 1,387명 / 소장자료 2,135만책 / 예산 약 180억원  
싱가포르(1999) 직원 750명 / 소장자료 547만책 / 예산 약 1,700억원
-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임에도 관장의 직급이 낮고 도서관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보임되어 왔음. 또한 관장의 재임기간도 매우 짧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오는데 한계가 있었음.
- 열람봉사에 많은 자원을 쓰고 있어 오히려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본기능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

#### ◆ 대안

- 21세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체 도서관을 대표하고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개발, 협력·조정, 정책 개발 기능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국 모든 도서관에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및 업무 개편.
- 대표도서관 위상에 걸맞는 시설, 인력, 자료 및 예산 확보. 특히 관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도서관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며, 각 지역에 분관 설치 운영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내 본관,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예정), 학위논문관, 자료보존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타 주요 도서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체제 구축 필요.
- 현재에는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봉사 기능을 축소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 역할 수행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 ◆ 정책과제

- 시설 확충(지역 분관 설치 등), 전문직원 확보 및 예산 증액.
- 관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 전문가로 배치.

### <공공도서관>

#### ◆ 현황

- 2002년 8월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 451개관이 설치·운영 중임.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권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설치율이 매우 낮음. (2001년 말 현재 3,512개 행정구역 중 12.0%인 420개 지역에만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국민 11만여명 당 1관 수준임.

-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1년 말 기준 411관 중 45.5%(191관)와 53.5%(220관)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다만 1990년 이후 공공도서관은 거의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료도 전체 도서관에 총 1억여책이 소장되어 있음. 국민 1인당 0.56권 수준임.
- ※ 미국(1996) 10,426관 (2만7천여명당 1관) / 자료 국민1인당 2.59권  
일본(1999) 2,585관 (4만9천여명당 1관) / 자료 국민1인당 2.19권  
캐나다(1995) 4,672관 (6천5백여명당 1관) / 국민1인당 2.29권
-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함. 1관당 평균 11.4명으로 직원 1인당 1만5천여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전문인력(사서)의 경우 법에 의한 정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배치율을 보이고 있음.
- ※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 기준 : 인구 2,500명당 상근직원 1명
- 공공도서관 1관당 예산은 평균 4억5천여만원임. 이 중 자료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은 11.5%에 그치고 있음.
- 도서관에는 다양한 서비스 공간과 함께 일반열람실이 있어 도서관이 개인들의 공부방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을 통해 모든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있음.

#### ◆ 문제점

-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시설, 인력, 장서, 예산 등 전반적인 요인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시험이나 학습 준비를 위한 공부방에 그치고 있음. 최근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명목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지식과 정보제공보다는 각종 강좌 중심의 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도 여전히 적지 않은 도서관이 전문가(사서)가 아닌 일반 행정가가 맡고 있으며, 도서관 조직도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관리, 문화활동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에 의하면 공립공공도서관은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기관(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서관의 절대적 부족과 운영능력의 부실로 인해 도서관간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함. 특히 운영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폭넓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민간위탁 확대 방침에 따라 도서관도 다수가 민간위탁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 도서관 대부분은 신규 도서관으로, 이는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새롭게 필요로 되는 사서직원의 정원 확보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택하고 있기 때문임. 민간위탁으로 인해 도서관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실화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지역내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특수계층(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편임.

#### ◆ 대안 / 정책과제

- 공공도서관 확충과 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 도서관 운영방식의 전면적 개선
- 전문가(사서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 체제 확립 및 전문직원 확충
- 공부방 기능 폐지와 문화활동 축소를 통한 지식·정보제공 기능 확립
- 명칭변경이나 민간위탁 방지책 마련

## &lt;대학교서관&gt;

## ◆ 현황

- 2001년말 현재 436관임.
- 대학교서관은 대학교육 활동의 핵심적 시설로서 학술연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장서의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함. 1관당 평균 25만여권을 소장하고 있음. 연평균 자료구입비는 약 7억원으로 이는 미국 대학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주요한 해외 학술정보의 입수는 크게 부족한 편임.

※ 연간 발행되는 해외 학술지 25만종.

국내 대학교서관이 구독하는 해외 학술지 종수 1만5천종(약 6%)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평균 구독 종수 1만5천3백종

(하버드대학 도서관 약 11만종, 버클리대학 도서관 약 7만9천종)

- 전문인력은 2000년 말 현재 1관당 9.4명의 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 문제점

- 대학교서관도 대체로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보다는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서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 내 도서관의 위상은 크게 높지 못함. 도서관장도 대부분 교수의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내 의사결정에도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대학교서관 체계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대학교서관 나아가 전문도서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부족함.

## ◆ 대안

- 대학 내에서의 도서관 위상 강화. 이를 위해 도서관을 직접 관장하는 학술부총/학장 제도 도입 필요. 또한 관장의 경우에도 교수가 아닌 도서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내부 전문가 활용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
- 대학교서관에 대한 투자 확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 시 도서관 부문의 비중을 높이도록 함.
- 장서의 확충과 전문직원 확보.
- 정부 각 부처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또는 지원 창구 일원화 필요.
- 도서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

## ◆ 정책과제

- 대학교서관을 부속기관에서 대학 기본시설로 위상 정립
-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 도서관 관련 평가비중 상향 조정
- 대학교서관 사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 &lt;학교도서관&gt;

##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학교도서관(도서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0년 말 현재 설치율은 78.6%에 불과함. 이러한 도서관들도 교실 1칸을 활용한 도서실이 대부분임.

※ 미국 96%, 영국 98%, 일본 99% (2000년)

• 학교도서관 장서는 1관 평균 5천여권, 학생 1인당 5.1권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4.4권에 그치고 있음. 다양한 학습활동에 필요한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크게 부족함.

※ 전체 도서의 40%가 한글맞춤법개정안시행(1989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미국 초등학교 88.1권, 고등학교 150.4권 / 일본 초등학교 20권, 고등학교 26.8권

• 인력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7천여개 학교도서관에 총 139명(1.75%, 2001년)으로 1관당 0.02명임. 이 경우에도 대부분인 126명(그중 97명이 서울)이 고등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음.

※ 미국 1관당 1.8명 (1994) / 일본 1관당 2.2명 (1999)

• 학교도서관 예산은 1관당 332만원, 학생 1인당 3천여원 뿐임.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지역교육청(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시민단체(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설치와 사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문제점

• 미설치 학교가 많고, 설치된 학교도서관들도 시설이나 장서,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문에서 크게 부족함.

•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 운영이 크게 부실한 상태임. 최근 일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설치 및 사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사서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고 운영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없음. 또한 직업적 안정성이 없어 유능한 사서교사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 대안

• 학교도서관의 연차적 확대 설치

•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서 확충 및 시설 개선

•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

• 지역교육청 내 전담조직 설치 또는 담당장학사 배치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 학교도서관과 지역내 공공도서관간 협력체제 구축

#### ◆ 정책과제

•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 개·제정. (도서관을 학교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교육인적자원부 내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교육청 내 전담조직 설치

• 사서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재 일하고 있는 임시/일용직 사서 문제 해소

• 학교도서관 평가 시스템 구축

### <전문도서관(정보센터)>

#### ◆ 현황

• 전문도서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또는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이를 위해 열람실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전자자료 3천권 이상 확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공공부문에서의 전문도서관은 정부산하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센터)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이 도서관들은 선진제국의 지식정보 식민지화나 지식정보의 예측화를 지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국내 고유의 지식정보콘텐츠의 생산과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학술정보유통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부처별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을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20개 행정부처 산하의 63개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분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중복투자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더욱이 국내 어느 정보서비스기관도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생산되는 국내 고유의 지식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가공한 후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음.

<표> 행정부처별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 현황

행정부처명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명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원자력), 원자력병원, 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원자력연구소, 포항공대,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무조정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국방부	기술부, 민군겸용기술센터
기상청	기상청, 기상연구소
노동부	기술교육대학
농림부	농림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업기반공사, 수의과학검역원,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요업기술원, 산업기술대학, 경기공업대학,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표준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철도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방재연구소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 ※ 미국의 경우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는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있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NASA, DOD, DOE, HUD, EPA 등 300여 정부기관에서 분석한 자료 및 각종 연구, 개발, 기술보고서들을 수록하고 있음. 여기에는 기계가독형 데이터파일, 소프트웨어, 미국정부 발명품, 외국 정부의 연구보고서 등도 포함됨. 또한 Government Reports Announcements & Index 등의 출판물 내용도 수록함. NTIS는 환경, 에너지 보존, 기술이전, 사회문제, 도시와 지역개발 및 계획 등의 관심 높은 주제분야는 물론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전반을 다루고 있음. NTIS 소장 정보자원의 약 75% 정도가 연구보고서이며, 이 이외에도 번역물, 서지자료, 특허, 회의자료, 정기간행물 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 국가차원의 학술정보센터로 1962년 처음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그 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업무이관이나 기구통합함 등으로 기관명 및 소속 행정부처의 계속적인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음.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서비스기관들은 정부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법적,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기관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 반면에 선진제국의 과학기술정보센터들은 40~50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명칭과 소속 행정부처를 달리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음.

#### ◆ 대안 / 정책과제

-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는 20개 행정부처 산하 63개 연구개발과제 관리기관에 의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지식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함. 이들 기관은 우선 과제 관리기관별로 접수되는 연구계획서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망라적으로 국가 고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함. 아울러 이를 국내 연구개발자는 물론이고 해외 정보서비스기관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해외 선진 학술정보서비스기관과 상호 대등하게 지식정보를 교류할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 정부는 가장 양호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부처별로 자기 운영중인 연구개발과제 관리기관과 주요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동일한 “연구보고서 자동수집 시스템”을 보급 및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함. 이와 함께 이 기관은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개별 연구실 또는 공장 차원에서 유통중인 지식정보까지도 수집하여 관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는 각 부처별, 각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학문분야별 인력 데이터베이스나 연구기자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즉, 이 기관은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고가의 연구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들 도서관들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등을 활용.
-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

#### <특수도서관>

##### ◆ 현황

- 특수도서관은 장애인이나 특수한 환경(군인, 경찰, 재소자, 환자 등)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 현재 특수도서관에 대한 통계자료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뿐임. 정부

(문화관광부)에서도 점자도서관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책을 시행하고는 있음.

- 기타의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도 시설과 장서, 전문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부족함.
- 최근 민간차원에서 군 부대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진중도서관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음.

#### ◆ 문제점

- 그 동안 특수도서관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적어 이 분야 도서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입안과 집행도 거의 없었음.
- 특수도서관은 장애인이나 특수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자료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부분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
- 특수도서관 부문의 협력체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타 도서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내 공공도서관 활동과도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 대안

- 특수도서관을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환시켜야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특수도서관으로의 구분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 필요.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자료의 특수성(점자자료 또는 녹음자료)을 고려하여 제작기기 개발과 자료의 생산과 보급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 정책과제

-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점자도서관 설립·운영.
- 지역 공공도서관에 특수서비스 부서 설치·운영.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제 강구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 기타 진중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노력 강구.

### <기타 사항>

####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울대회 개최 준비 지원

- 2006년 서울에서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가 개최됨.
-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세계 도서관계 인사들의 방한을 통한 도서관의 선진기술과 경험 습득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일정한 관광수입과 국가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기대됨.
- 이 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사서자격제도 개선

- 사서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도서관 관련 전문자격임.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 자격을 취득하고도 도서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서는 궁극적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국민들의 원활한 지식과 정보 활용을 도와 지식기반사회 건설과 국민의 지식인화에 기여하는 도서관·정보관련 전문가임. 따라서 국민들의 도서관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각급 도서관에서의 사서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국립어린이도서관 건립**

- 최근 한 텔레비전 방송사가 전개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캠페인이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이 캠페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임. 방송사 이외에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등 많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간차원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립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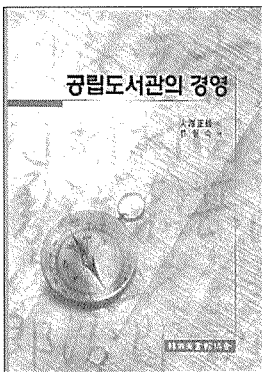
◆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의 확고한 추진**

- 2002년 8월 이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각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과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추진계획’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을 입안하여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은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음. 다만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한 약 2조6천여억원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기왕에 발표된 각종 도서관 관련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신 간

공립도서관의 경영

大澤正雄 著  
류현숙 역



신국판/237쪽  
ISBN 89-7678-062-0  
정가 11,000원  
회원보급가 8,800원

목 차

- 공립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의 행정과 재정
- 도서관의 자유
- 시설관리와 운영
-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을 개관한다
- 자료의 관리
- 도서관을 받쳐주는 힘
- 도서관 인사관리
- 도서관 관련 단체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